

이주노조 조합원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추모 위해 화성시청 분향소 방문 "함께하겠습니다"

조연주 기자 | © 승인 2024.07.07 18:38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일하다 죽으러 오지 않는다. 우리도 피땀 흐르는 사람이다"
이주노조, 아리셀 참사 유족들,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 활동가들 함께 기자회견



이주노조와 화성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단체, 이주민 당사자 활동가들과 유족들이 7일 만났다. 사진=백승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주노조(MTU) 조합원들이 화성시청 분향소를 찾았다. 이주노조와 화성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단체, 이주민 당사자 활동가들과 유족들이 7일 만났다.

같은날 희생자 중 한 명이 생전 거주하던 충북지역에서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화성시청을 찾아 애도를 표했다. 이날 화성시청 분향소에 모인 유족들과 충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둘러앉아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위로를 주고받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한 설명을 들은 참가자들은 "최근 충북지역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참사와 무엇 하나 다르지 않다"라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위험의 외주화가 위험의 이주화로 확대, 이동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이번 참사가 이 불안하고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는 커다란 진전이 되도록 함께 하겠다"며 마음을 나눴다.



이주노조와 화성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단체, 이주민 당사자 활동가들과 유족들이 7일 만났다. 사진=백승호



이주노조와 화성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단체, 이주민 당사자 활동가들과 유족들이 7일 만났다. 사진=백승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이주노동자 추모행동' 기자회견을 오후 3시 진행했다. 이들은 추모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이주노동자 사망 소식이 들려온다. 산재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돌연사도 많다. 이제는 제발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촉구한 근본대책은 첫 번째로 이주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개선점검과 지원강화다.

또한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확대, 외국국적 동포노동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계절노동자 전문인력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노동자 고용을 노동부에서 관할하고 사업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 위험한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도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근본대책이다.



이주노동자와 화성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단체, 이주민 당사자 활동가들과 유족들이 7일 만났다. 사진=백승호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MTU) 위원장은 "아리셀은 비용을 줄이고 고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동포 노동자들을 인력업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을 시켰다. 이처럼 단단계 파견노동은 더욱 위험을 키우고 있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사고 비율은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다"고 한 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이 계속되는 것은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 강제노동, 사업주 권리만 보장해주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이 비극은 국적이나 고용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규정과 엄격한 집행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파견제도는 정년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모든 노동자의 꿈에 반하는 불규칙한 노동조건을 영속화한다. 파견시스템은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다. 재난이 발생해 노동자가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파견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다. 노동자의 생명이 이중으로 위협받고 있는 지금 당장 파견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차마카라 수원이주민센터 공동대표는 "이제 이주노동자가 없는 한국 공장은 없다시피 하고, 우리는 매년 집회를 열고 '이주노동자는 죽으려 오지 않는다'고 외치지만 세상은 들어주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까지 한국이 필요하면 쓰고 필요없으면 버려지는 기계취급을 받아야 하나. 우리도 피와 땀이 흐르는 사람이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유가족과 대화를 통해 조속조치 원인규명 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하청금지과 중처법 기업에도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주노조와 화성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단체, 이주민 당사자 활동가들과 유족들이 7일 만났다. 사진=백승호



이주노조와 화성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단체, 이주민 당사자 활동가들과 유족들이 7일 만났다. 사진=백승호

이상정 충북도의회 의원도 발언에 나섰다. 충북지역 추모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이 도의원은 "이 참사의 구조적인 문제가 노동자들의 불법파견문제였고 비정규직 문제였다는 점에서 화가 난다.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이 일회용품,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 화성시와 시의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희생에 대해서 대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장 이주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화성시 마도면에서 일하고있는 네팔국적의 이주노동자의 '폰네' 조합원은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전설비와 교육을 요구하면 '너희들은 돈벌러 온 것 아니냐'며 무시한다. 그것 때문에 바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주노동자 안전장비와 교육받을 권리 보장해야한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야하고 강화해야한다"고 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이주노동자 '알리' 조합원은 "우리가 일하러 한국에 오는 이유는 하나다. 돈을 벌어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지, 죽으러 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안전한 일자리가 없어서 이번에도 사고가 난 것이다. 안전한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정도 정부도 책임져야한다. 이 나라에서 건강한 몸으로 죽지 않고,일하고 싶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제는 제발 위험의 외주화와 이주화를 멈춰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근본대책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와 화성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단체, 이주민 당사자 활동가들과 유족들이 7일 만났다. 사진=백승호



이주노조와 화성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단체, 이주민 당사자 활동가들과 유족들이 7일 만났다. 사진=백승호



조연주 기자 nojojogirl@gmail.com